

긴 산고 끝에 8부 능선 오른 IPTV

인터넷(IP) TV가 긴 산고 끝에 8부 능선을 넘었다. IPTV를 발판으로 방송시장에 진출하려는 통신사업자와 이를 막으려는 방송사업자가 서로를 향해 치켜세웠던 서늘이 조금씩 무디어지기 시작한 것. 특히 IPTV 사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별 없이 기존 방송사업자 콘텐츠에 접근(구매·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명확해지면서 방송·통신사업자 간 첨예했던 대립각이 180도를 향해 크게 내려갔다.

IPTV가 불러올 시청문화의 변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채널 단위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공정거래질서 저해 여부를 기준으로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기존 방송사업자의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들도 케이블TV 방송사업자들처럼 지상파TV방송을 비롯한 각종 채널(PP)을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는 IPTV를 통해 피동적인 '일방향 방송(브로드캐스팅) 시청체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시청 시간과 대상을 정하는 능동적인 '쌍방향 방송(나로우캐스팅) 시청시대'로 걸어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한도전'을 보려고 토요일 저녁 TV 앞에 앉거나 케이블TV 재방송 시간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 궁극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소비자 편한 시간에 맞춰 안방으로 배달하는 셈이다. TV 시청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잠깐, '채널' 단위라니? 'MBC'와 같은 채널을 통째로 달라는 뜻이잖아.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그램은 따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필자 이는 사람의 물음이다. '무한도전'과 같은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지 들어간 창의력, 시간, 돈 등을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필자는 이에 "그럴 거였다면 애초 인터넷(IP)TV 사업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기 위한 진통도 없었을 테고, 그냥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영화를 팔듯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돈 받고 제공하면 될 테니까"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또 "무엇보다 소비자가 '더욱 많은 방송프로그램(채널)을 더욱 다양한 방송체계(플랫폼)로 더욱 싸게'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와 방송사업자가 모두 웃으려면?

물론 이 같은 시각은 KT 등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걱정하는 일부 방송사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중심으로 KT와 같은 거대 통신자본의 방송시장 잠식을 우려해 "격접 경영하지 말고 IPTV 자회사를 만들라"고 주장해온 터이니 소비자 편익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지는 필자 주장이 눈엣가시일 수 있겠다. 이제 시선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돌릴 때다. 소비자 편익과 기존 방송사업자

들의 걱정 모두가 방통위 최소 규제에 달렸기 때문.

IPTV가 활성화할 토양을 만들어 소비자가 더욱 많은 채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엄격하고 객관적인 '회계분리'와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통신자본의 시장지배력이 방송분야로 옮겨가 기존 방송사업자들을 고사시키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 통신자본에 기존 방송사업자가 도태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뒤에는 몇몇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약탈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는 곧 소비자와 방송사업자가 공멸하는 길이기 방통위가 마지막 버팀목이어야 할 이유에 닿는다.

기존 방송업계에 고통만 따르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가 케이블TV방송업계의 '검영 및 사업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단일 SO가 다른 SO를 수평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매출액 기본 33%로 제한함과 동시에 방송구역 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제를 얼마간 풀겠다는 것이다. 방송구역 내 유료 가입가구의 5분의 1로 제한한 규정을 3분의 1로 넓히겠다는 정책 방향은 공식화했다. 이는 유료TV방송 소유·검영 규제가 사업자별 영업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방송구역 내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도 지역별 가구 수 편차로 말미암아 규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또 다채널 유료TV방송사업자 간 검영·소유 관련 규제를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에 따른 '지배관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SO 소유·검영 규제 타당성·범위·일정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

앞으로 IPTV가 8부 능선을 넘어 정상에 올라 시야를 넓게 트기 위한 과제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범위·방법·절차·대가산정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구체적인 동등제공 필수설비는 무엇인지, 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할 사유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합리적인 필수설비 이용 대가는 얼마인지에 방송사업자는 물론 IPTV 사업에 진출하려는 이들의 시선이 몰린 상태다.

또 올바른 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IPTV 사업자가 몇인지, 경쟁사업자 간에 서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는 않았는지, 콘텐츠(방송프로그램)가 합리적으로 거래되는지 등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지는 얘기. 특히 시장에 진입장벽이 서지는 않았는지, 몇몇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독과점적 지위에 오른 건 아닌지를 살피고 제한(규제)할 기준을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세워야 한다.

소비자의 IPTV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이 어렵지나 않은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정 IPTV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나 사업자를 선택하기에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IPTV 요금·품질·기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도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korpa